

보험업감독규정

<목 차>

- 1.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보험기간 설정
- 2.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절차 마련
- 3.보험회사의 소송현황 비교공시 확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김기훈
	담당부서 (과)	보험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권대영		연락처	02-2100-2962
	과장	김동환		이 메 일	2081045@mail.go.kr

2021. 03. 03. 작성

정책 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소액 단기전문보험회사 보험기간 설정								
	2.규제조문	보험업감독규정 제2-11조								
	3.위임법령	보험업법 시행령 제13조의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3.10 ~ 2021.04.1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보험업법 개정('20.12.8)에 따라 보험산업 경쟁 촉진을 위해 새로이 도입되는 소액 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설정								
	7.규제내용	소액 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설정(시행령에서 2년이하로 위임)								
	8. 피 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소액 단기전문보험회사를 설립하려는 예비사업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 규제자</td><td>예비사업자</td><td>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에 관한 것으로 사전에 예비사업자 추산 불가</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 규제자	예비사업자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에 관한 것으로 사전에 예비사업자 추산 불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 규제자	예비사업자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에 관한 것으로 사전에 예비사업자 추산 불가								
9.규제목표	소액 단기전문보험회사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소액 단기보험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									
규제의 적정성	10.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시행령 개정안에서 소액 단기전문보험회사의 최저 자본금 등을 정하고 있으며, 비용검증 결과 별도 비용은 없는 것으로 산출됨. (기존 보험회사 대비 최저자본금 감소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절감) 스타트업, 핀테크기업 등의 보험산업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투자, 일자리 등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기타	12.일 몰 설 정 여부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2-11조(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u>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한다.</u></p>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현재 보험업법상 종합보험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높은 자본금(300억원)이 필요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환경
 - 이에 '20.12.8일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소액·단기 보험상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를 도입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최저자본금 등)
- ☐ 시행령 개정안에서 최저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감독규정에 위임하고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설정
 -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개정안에서 보험기간을 2년이하의 범위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예측하지 못한 위험 발생 등을 고려하여 보험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것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예비사업자	입법예고(3.10.~4.19.)	

3. 규제목표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세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스타트업, 핀테크

기업 등의 보험산업 진출을 촉진하고 투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시행령에서 위임(2년 이하)하고 있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것으로 소액단기 보험 활성화 목표에 적합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중기영향평가

소규모 보험회사의 진입 촉진을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소규모 보험회사의 진입 촉진을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① 규제 영역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⑥ 차등화적용 여부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보험업 인가정책에 관한 것으로 보험산업 건전성 및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님

- 일몰설정 여부

보험업 인가 세부기준은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일몰 설정 부적절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 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일본은 소규모 공제를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는 보험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06년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하였으며,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설정

○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금번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의 인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신규로 보험산업에 진입하려는 자에 적용되는 만큼 규제 준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금번 개정안은 보험업의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소요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예산 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20.12.8일 개정됨에 따라 소액단기전문보험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반대의견 없음

2. 향후 평가계획

시행 이후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설립 허가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

3. 종합결론

그동안 진입장벽이 높았던 보험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의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편익

(정성)세분류	예비사업자
활동제목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설립
편익항목	자본금 등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새롭게 도입되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현재 영업중인 보험회사 등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의무가 없으며 기존에 비해 자본금 요건 등을 완화한 점 (300억원에서 20억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규제완화에 해당하는 만큼, 비용편익 분석 대상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 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절차 마련								
	2.규제조문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3.위임법령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의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3.10 ~ 2021.04.1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div><input type="checkbox"/> 보험업법 개정('20.12.8일)으로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평가금액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계리업자를 통한 검증*(외부검증)이 의무화됨</div> <div>* 계리업자 :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책임준비금 등 주요 항목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 작성 등을 수행</div> <div>보험요율산출기관 : 보험산업 참조순보험요율 산출, 보험회사의 보험료·책임준비금 등 기초서류 확인 및 보험수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div> <div><input type="checkbox"/> 이에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할 필요</div>								
	7.규제내용	보험업법 개정('20.12.8일)에 따라 의무화된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산출·적립의 적정성 외부검증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외부검증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보험회사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보험회사</td><td>41개 보험회사</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보험회사	41개 보험회사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보험회사	41개 보험회사								
9.규제목표	책임준비금을 적정하게 적립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보호는 물론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안정성 및 신뢰도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관한 외부검증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분석은 시행령 개정시 진행하였으며, 감독								

		규정은 단순히 검증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
기타	12. 일몰 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6-11조(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① 보험회사는 영 제63조의2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감독원장이 지정한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업자에게 재검증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 보고서의 작성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보험업법 개정('20.12.8일)으로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평가금액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계리업자를 통한 검증*(외부검증)이 의무화됨

* 계리업자 :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책임준비금 등 주요 항목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 작성 등을 수행

보험요율산출기관 : 보험산업 참조준보험요율 산출, 보험회사의 보험료·책임준비금 등 기초서류 확인 및 보험수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

- ☐ 이에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23년부터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 17)가 도입되는 만큼 이에 대비하여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기준을 마련할 필요 시행령 개정안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감독규정에서는 검증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보험회사	입법예고(3.10.~4.19.)	

3. 규제목표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보험회사별로 특화된 상품구조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자율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제3자의 외부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보험회사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책임준비금 적립의 적정성을 개선할 수 있어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대기업인 보험회사(자본금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할 여지 없음)에 대한 규제 강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중기영향평가

대기업인 보험회사(자본금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할 여지 없음)에 대한 규제 강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⑥ 차등화적용 여부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자율적 책임준비금 적립을 허용하되 외부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시장유인적 규제설계에 해당

- 일몰설정 여부

책임준비금은 매 결산시마다 적립하는 것으로 일몰 설정 부적절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 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타법사례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이미 외부감사 등을 받고 있는 대기업인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관한 부분을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법인에 검증 받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보험회사 감독시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을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므로, 행정적 집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 재정적 집행가능성

재정 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보험업법 개정('20.12.8일)에 따른 세부기준을 시행령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반대의견 없음

2. 향후 평가계획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 시 이후 책임준비금 규모 변화를 점검할 계획

3. 종합결론

보험계약자 보호 및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안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

해, 책임준비금 산출·적립의 적정성 등을 외부의 제3자로부터 검증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세분류	보험회사
활동제목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결과 제출
비용항목	제출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에 따른 검증비용은 시행령에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감독규정에서는 해당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음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보험회사의 소송현황 비교공시 확대								
	2.규제조문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3.위임법령	보험업법 시행령 제67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3.10 ~ 2021.04.1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보험회사의 무분별한 소송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공시 하여야 하는 정보에 소송현황을 추가할 필요								
	7.규제내용	현재 보험회사가 공시하고 있는 정보(소송제기건수 등)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div>보험회사</div>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보험회사</td><td>55개 보험회사</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보험회사	55개 보험회사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보험회사	55개 보험회사								
9.규제목표	보험회사의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의 선택권, 알권리 등을 보장									
규제의 적정성	10.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보험회사가 기존에 공시하여야 하는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소송관 리위원회 운영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공시항목 증가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								
기타	12.일 몰 설 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46조(보험상품의 비교·공시 등)	제7-46조(보험상품의 비교·공시 등)
①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호의 구분별로 각 목의 사항을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보험,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한다) 및 특정가입단체와 제휴하여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제외한다.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보험회사별	3. 보험회사별
가. ~ 나. (생략)	가. ~ 나. (생략)
다.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및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등	다.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u>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및 소송관리위원회 소송심의 현황 등</u>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최근 일부 보험사가 무리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보험회사의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보험회사	입법예고(3.10.~4.19.)	

3. 규제목표

보험회사의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을 공개함으로 보험회사의 무분별한 소송제기를 방지하는 등 보험회사의 책임성을 강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보험회사의 무분별한 소송제기 방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보험회사의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목적 달성에 필요한 규제 도입으로 판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모든 보험회사에게 동일하게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중기영향평가

보험회사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제로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보험회사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제로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① 규제 영역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⑥ 차등화적용 여부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소송관리위원회는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되, 해당 운영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시장유인적 규제에 해당함

- 일몰설정 여부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 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타법사례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현재도 보험회사는 다양한 정보를 공시중인 만큼, 공시항목 추가에 따른 업무부담은 크지 않을것으로 판단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공시하는 것으로 행정 부담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재정 소요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보험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년 11월 9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험회사의 소송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함

2. 향후 평가계획

보험회사가 공시해야하는 항목을 제대로 공시하고 있는지 보험협회 등을 통해 점검

3. 종합결론

보험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제기를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규제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보험회사의 소송현황 공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34.56		34.56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34.56		34.56
기업순비용		34.56	연간균등순비용	4.17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보험회사의 소송현황 공시>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보험회사
활동제목	보험회사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 공시
비용항목	노동
비용	34,563,544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1명X1시간X2회(반기별)X시간당 근로임금X피규제보험회사수 (1*1*2*38000*55)
근거설명	<p>현재 보험회사는 반기별로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안은 추가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임</p> <p>보험회사는 현재 반기별로 공시해야하며, 단순히 공시항목이 추가되는 것이며 그 항목이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수치인 만큼 최대 1시간의 업무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p> <p>현재 국내에 55개의 보험사가 있는 만큼 투입인원(1명), 추가로 발생하는 업무시간(1시간), 연간 2회, 시간당 근로임금(3.8만원), 보험회사수(55개)를 곱하여 최종비용을 산출</p> <p>(시간당 근로임금은 대형, 중형, 소형 각 1개 보험사의 사업방법서를 기준으로 평균연봉(대형 8,300만원 / 중형 7,700만원 / 소형 6700만원), 연간 근무일수(250일), 일평균 근무시간 8시간을 적용하여 계산)</p>

②피규제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보험소비자
활동제목	보험회사의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 확인
편익항목	보험회사 정보 확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p>보험회사의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을 공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이를 참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됨</p>
--	---